

“경제 위기 대응” 광주시, 3천814억원 추경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회복 집중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행정체계 구축 지하철 2호선·군공항 이전 현안 반영

광주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해 총 3천81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 예산 7조6천800억원보다 5.0% 늘어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추경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 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 경험 지원 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 4억8천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차 동차 민간보급 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12억3천만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6억원 등을 반영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폭우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 126억원, 폭염대책 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 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담았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 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2차 실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40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전'

이달까지 인센티브·정주여건 집중 홍보

전남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발맞춰 유치 성과를 가를 골든타임을 6월로 설정,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추진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공유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전제로 에너지, 농수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분야를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유치 목표기관을 발굴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추진단은 현재까지 목표기관 중 22개 기관을 방문, 전남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정주여건, 인센티브 등을 알리는 유치 활동 등 집중 전개했다.

전남도는 6월 말까지 남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 인추위를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범특별시 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주민 의지를 결집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도 공유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입 증대 6천172억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4천83명, 기업입주 1천171개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교육, 교통, 의료서비스 등 혁신도시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시원기자

광주 영유아시설 등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식품제조업 지하수와 영유아시설 환경 검체 등 45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및 5개 자치구 위생 부서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감시망을 기존 지하수 중심에서 유통 김치와 영·유아시설까지 대폭 넓혔으며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맞춰 상·하반기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사는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12개 시설의 식품 제조용 지하수 12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10곳의 환경 검체(문고리, 장난감, 수도꼭지 등) 30건, 광주지역 유통 배추김치 3건 등 총 4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지하수를 포함한 45건 시료 전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식품 제조·유통 과정과 영유아

보육환경이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변은진기자

여수·순천 10·19평화문화상 공모

전남도는 2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3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화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여수 평화문학상은 (재)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며 공모 부문은 소설·시·아동문학 등 3개 분야다. 거주지·연령·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200매 이내의 중·단편, 시는 5편, 아동문학은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 또는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작은 8월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작품에 한해 접수한다. 원고는 한글문서(HWP) 파일로 작성해 전남문화재단 이메일(peace1019@jn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전남 5개 시·군, 생활인구 늘리기 박차

목포·구례·강진·무안·진도 공모 선정 체류형 인구 정책 확산...지역 활력 ↑

전남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체류·관계·재방문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와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별 자원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생활인구 모델 발굴과 우수 사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목포시, 구례군, 강진군, 무안군, 진도군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3억6천만원 규모로 도비 1억800만원과 시·군비 2억8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목포시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Run Trip)' ▲구례군 '도시민 유입부터 정착까지 귀농귀촌 4-STEP 리빙스테이' ▲강진군 '강진품에(愛) 살아볼래(來)' ▲무안군 '무안항토끼별랜드 생활인구 증대사업' ▲진도군 '일단 한번 진도나가게!(1박 2일 진도 빼기)'다.

사업 유형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했다. 목포시는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를 통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구례군

은 귀농·귀촌 체험과 지역 정착을 연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군은 지역 체험과 주민 교류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모델을 추진하며 무안군은 가족 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진도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콘텐츠 확산을 통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재방문과 정주 전환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광주 통합 생활권과 연계해 체류·관계형 인구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우수 모델은 전 시·군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생애 마지막 캐네이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맞는 어버이날은
어르신에겐 그저 평소보다 좀 더 시린 날일 뿐입니다.

월 2만 원으로 '어버이날 선물' 전하기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